

여성정책 국내동향



2025년 6월 2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등재자 대상 특화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는 여성인재DB에 등록된 여성인재의 역량강화와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6. 23.(월) '여성인재DB 등재자 특화교육'을 실시함.

- 2024년 말 기준 17만여 명의 여성인재가 등재되어 있으며, 등재자는 정부위원회 위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공공부문 주요 직위의 후보군으로 활용됨.
-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 등재자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재DB 등재자에게도 특화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 여성인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6.20.]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jsessionid=bijtdpl6uZx+b7y1eMxehzSJ.mogef20?mid=news405&bbtSn=710548

최저임금위원회, 2025년 제6차 전원회의 개최

🔍 최저임금위원회는 6. 19.(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 지난 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며, 그 결과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함.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5.06.25.]
<https://www.minimumwage.go.kr/customer/news/view.do?bulletnId=4597&pageUnit=10&pageIndex=1&bulletnCd=MA&searchCondition=&searchKeyword=>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결혼·출산·육아에 도움 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거정책' 공유 및 확산 유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과제로 꼽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맞춤형 주거정책'의 전국 확산에 나섬.

- 이는 주거문제가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결정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임.
 - * '24 통계청 사회조사 : 결혼을 미루는 이유-(1위)주택마련 등 결혼자금 부족(31.3%)
 - **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25.3월) : 인지도-(1위)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공급 확대(77%)
-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의 3대 핵심과제인 ①주거, ②양육, ③일·가정양립 중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자체의 특화정책을 결합한 우수사례를 4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타 지자체에 확산을 당부함.

참고자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5.06.19.]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490&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저출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2025. 06. 12.	<p>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심의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을 추가하며, 현행법의 '인구의 날'과 달리 저출생에 보다 초점을 맞춘 기념일을 제정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고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p> <p>〈주요내용〉</p> <p>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사업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p> <p>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 수를 30인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p> <p>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p> <p>라. 매월 1일을 출생 장려의 날로 정함(안 제30조의3 신설).</p>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2025. 06. 13.	<p>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p>
	돌봄기본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	2025. 06. 17.	<p>돌봄을 국민 개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돌봄을 주고받을 권리를 기본권 차원에서 보장하며,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공공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의롭고 신뢰받는 돌봄사회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p> <p>〈주요내용〉</p> <p>가. 돌봄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돌봄정책의 방향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p> <p>나. 누구든지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돌봄을 받거나 제공할 때 차별받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p> <p>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p> <p>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따라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8조).</p> <p>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제공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돌봄의 공공성·보편성을 확보하고 통합 돌봄체계를 정착시키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고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균형 있는 삶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p> <p>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책임의 민주적인 분담과 돌봄당사자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민주적 참여, 돌봄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돌봄의 관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p> <p>사. 돌봄청장은 돌봄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돌봄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9조 및 제20조).</p> <p>아. 돌봄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p> <p>자. 국가의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청장이 돌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 정도를 지수화한 돌봄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도록 함(안 제23조).</p> <p>차. 돌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돌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가.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안 제28조).</p> <p>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청장이 돌봄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p>

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내용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1인)	2025. 06. 2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봄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 함 (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여성고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 06. 20.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2025. 06. 20.	현행법의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 및 승진소요기간에 모두 산입 하도록 명문화하여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심사에서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함 (안 제19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 06. 25.	사용사업주도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의무를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성희롱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방 효과를 제고하려는 함(안 제34조).
젠더폭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	2025. 06. 13.	잠정조치 통지 대상에 경찰관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행위에 스톱킹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의료기관 등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스톱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6인)	2025. 06. 19.	가정폭력행위자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의원 등 11인)	2025. 06. 19.	교제폭력행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스톱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추가하여,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제폭력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톱킹범죄에 해당하여 잠정조치 및 벌칙조항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연구결과/행사내용 관련

과제/행사명	날짜	매체명	제목	기사링크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5.06.16.	충청매일	[여성의 눈]지역 성평등지수, 여성폭력피해 유형·수위와 연동돼 있다.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165
여성연구 2022년 1호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25.06.17.	아시아경제	"남자들도 무조건 쉬어라" 하는 회사도 있는데...공시 의무에 '男육휴' 확산 기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61113313850669
[국회토론회]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25.06.19.	위메이크 뉴스	“교제 중이었든, 헤어졌든...폭력은 폭력”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1997
	25.06.20.	헤럴드경제	與 최기상 “교제폭력 법적 정의·보호 수단 규정하지 않아 여전히 많은 피해자 위험 노출” [이런정치]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13707
	25.06.20.	시장경제	최기상 “교제폭력, 이제는 법으로 막아야”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883
	25.06.21.	여성신문	최기상 의원, “교제폭력, 이제는 법이 막아야 한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947
	25.06.24.	뉴스핌	李公약 ‘교제폭력 처벌 강화’ 첫걸음...與, 교제폭력 정의 규정 신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624001145
	25.06.24.	여성신문	“교제폭력, 법으로 막자”...스토킹처벌법 정의 신설 긴급 토론회 열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4102
[국회토론회] 2025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정책 대토론회	25.06.23.	교수신문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토론회 열린다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693
		BBS NEWS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토론회, 26일 개최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5660
		이뉴스 투데이	WISET,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국회 정책 대토론회’ 26일 개최	https://www.ew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3627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I)	25.06.23.	경향신문	상상된 성평등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32048015
2024년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25.06.24.	베이비뉴스	“우린 점점 불리해져”... 여성 관리자 성차별 체감 ↑, 남성 관리자 “괜찮아지고 있는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284
젠더기반 폭력으로서 친밀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방향 모색	25.06.23.	평화뉴스	여성폭력의 법·제도적 문제, 이재명 정부의 해법은?	https://www.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4
혼인 출산 관련 인식 심층 연구	25.06.24.	일요서울	[긴급진단] “대한민국 여성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934



주4일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 사회 : 글로벌 실험 성과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 주요 국가들에서 추진된 주4일제 실험의 특징을 살펴보고, 주4일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사회적 준비 요소를 살펴봄.

- 주4일제 실험은 국가 차원(아이슬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부터 지방정부(영국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프랑스 리옹과 오브자, 빌뢰르반, 독일 베델시, 스페인 발렌시아, 일본 군마현, 치바현, 미국 골든시 등) 그리고 민간 부문의 개별 기업(프랑스 EDEC 및 파리고통공사, 영국 Atom 은행, 독일 스파르타 은행, 적십자병원)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주4일제나 주4.5일제와 같은 정책이 향후 전개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입법 및 정책과제가 요구됨. 첫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논의가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과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둘째,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시간 법률 개정이나 여타의 정책도 수립되어야 함.

참고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정보브리프 2025년 제2호(통권 제96호), 2025. 06. 20.]
https://www.kli.re.kr/kli/issuePaperView.es?pbclt_sn=10196&mid=a10104020000&nPage=1&sch_yr=&sch_type=&sch_keyword=&sch_prdcl=%EC%9E%84%EA%B8%88%EC%A0%95%EB%B3%B4%EB%B8%8C%EB%A6%AC%ED%94%84

결혼이주여성의 건강(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내 결혼이주여성 관련 통계와 작년에 전국적으로 수행된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국내 결혼이주여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찰하고, 건강 수준을 주관적 건강 수준, 정신건강, 건강관리로 나누어 살펴봄. 건강 현황과 함께 사회경제적 위치, 헬스 리터러시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따라 건강 수준 분석 결과를 제시함.

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5년 6월호, 2025. 06. 01.]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list>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과제(한국교육개발원)

🔍 늘봄학교 정책 도입 이후 현 시점까지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늘봄학교 정책은 보호자(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학생의 성장 발달과 공교육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파악됨.
- 늘봄학교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정책방향 수립, '교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수립, 법률적 근거 마련, 안정적 인력 확보와 지역의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 방안 필요

참고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KEDI Brief, 2025. 05. 22.]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KediBriefForm.do?selectTp=0&board_sq_no=41&article_sq_no=36036